

‘대선 보도 개입’ 야욕 드러낸 김도인 이사, 자신이 왜 ‘적폐’인지를 잊지 말라.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 이사가 MBC 보도 과정에 개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김도인 이사는 그제(12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해 내년도 MBC 경영진에 전달할 경영지침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의 김웅 녹취록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MBC만 윤석열 이름을 쓴 것은 교차 검증이 안 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지침 첫 번째 항목인 ‘공영성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의 구현’에 “교차 검증에 유의하여”라는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김 이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MBC의 보도가 잘못된 보도인 것처럼 발언했다. 지난 6일 MBC가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 보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한 교차 취재에서 확인된 내용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이었다. 같은 날 윤석열을 검찰로 표현해 보도했던 SBS도 다음날 기사에서는 MBC처럼 윤석열로 수정해 보도했다. 또한 다수의 언론이 MBC 보도 이후 김웅 녹취록 관련 기사에 윤석열 이름을 거론하여 보도하고 있다. 검증이 필요한 대상은 MBC 보도가 아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도 내용에 교차 검증을 운운한 김 이사 본인이다. 방문진 이사를 연임까지 한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언사다.

또한 김 이사는 MBC 보도본부장을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시켜 내년 대선 보도의 방향성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방문진 이사들이 이에 대해 보도본부장을 출석시켜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강요하는 것은 방문진 권한에 없는 일이며, 12월 방문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듣자면서 반대하자, 김 이사는 12월은 대선 목전이라 너무 늦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이사의 이 같은 발언과 일련의 요구들은 MBC 경영 감독기관에 머물러야 할 방문진 이사가 MBC 보도에 개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고,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내리겠다는 망발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방문진 이사의 월권을 넘어 대선 보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경영기구가 아닌 경영 ‘관리·감독’ 기구이다. 방문진법 제10조는 이 사회의 기능을 공적 책임, 경영평가, 정관변경, 사장 추천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한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방문진 이사가 MBC 내 방송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분리해서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는 것과 공정성은 별개임을 의미한다. 만약 김 이사가 공적 책임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경영 지침에 공정성을 거론한 것이 MBC 보도에 개입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방문진 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사화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보도 행위에 마치 불순한 의도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김 이사의 발언 의도가 불순한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문진 이사회 12기가 출범한 지 이제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김도인 이사가 MBC 보도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려는 야욕을 또다시 드러낸다면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 불법 행위를 일삼으려는 김 이사 스스로 왜 본인이 MBC 구성원들로부터 ‘적폐’로 불리고 있는지를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